

바이든 행정부 첫 아시아계 장관 지명



▲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줄리 수현 노동부 차관. 사진=upi.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노동부 장관에 중국계인 줄리 수현 노동부 차관을 지명했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줄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어떤 지역사회도 간과하지 않으며 어떤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생을 보냈다"며 그를 최근 사임한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면 바이든 정부의 첫 아시아계 장관이 된다. 출범 2년이 넘은 바이든 정부에는 지난 20년간 역대 미국 정부 중 처음으로 아시아계 장관이 없는 상태다.

수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내고 바이든 정부 첫 해인 2021년 7월 노동부 차관에 발탁됐다. 상원은 현재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이 5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월시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장관직을 공식 사임하고 북미아이스하키리그 선수노조(NHLPA)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임한 장관이다. 그가 물러난 후 주요 노동조합과 의회 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코커스와 블랙 코커스 등에서는 수 차관의 장관 지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었다.

“75세 넘은 정치인 자격시험 치러야” ... 미국인 77% 찬성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공화당 대선주자 니키 헤일리(51)의 제안에 미국인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채널 폭스뉴스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등록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20%, 찬반이 확실치 않다고 답한 이는 3%였다.

헤일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말까지 유엔주재 미국대사로 재직했으며 2024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지난달 14일 공식 발표했다. 그가 고령 정치인들에 대한 정신 능력 검사 의무화를 주장한 것은 각각 현직·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80)과 도널드 트럼프(76) 등 대선 경쟁자인 고령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후보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8%로 2위였고, 헤일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각 7%, 그레그 애



▲ 미국인의 77%는 고령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shutterstock

벗 텍사스 주지사와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권자들 중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의 비율은 53%로, 바이든을 차기 후보로 지지하는 37%보다 높았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전체 유권자에 대해서는 ±3%포인트, 민주당 혹은 공화당 유권자에 대해서는 ±4.5%포인트다.

바이든, 코로나 지원금 관련 피해자 구제 자금 요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혐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유행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1	겨	레		2	바	3	이	러	4	스		
	우						불		5	키	6	위
7	내	8	흥		9	흥	보					선
		10	살	며	시				11	방	자	
12	교	문					13	식	중	독		
	두				14	자	비		15	면	16	허
17	보	18	필			릿						깨
		19	기	성	세	대			20	랍	비	

		2	6	7				8	9			
1				6					3			
							5				6	
		3	1					2				
							4	7		1		
7	8						2					
							9				2	
9	1	3										
							1	6			5	8